



배포 일시	2023. 3. 17.(금)		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	책임자	과 장 임월시(044-201-3855)
	자동차운영보험과	담당자	사무관 김태흥(044-201-385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전기차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· 장비의 신속한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3.16) >

◆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구멍.....검사소 80%, 인력·장비 없다

- 배터리 정기검사 민간 1,833곳 중 313곳만 가능, 검사의무 없어 안 지켜도 돼, 전기차 안전 관리법도 미비, 과열·방전 안전점검 규칙 없어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전자장치진단기 등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장비를 개발하여 민간검사소에 보급*하고 있으며, 중·장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보완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.

*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검사소에는 전자장치진단기를 보급완료 '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민간검사소 313곳에 전자장치진단기를 보급 중이며,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

- 아울러,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등 전기차의 안전검사를 원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59개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성 검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기차 안전검사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고,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.

-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(www.kotsa.or.kr)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갖춘 검사소를 안내할 예정이며,

- 전문인력 확보 및 검사장비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, 올해 안으로 전기차 안전검사의 세부항목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